

은퇴 전후 세대 재정안정성

-노년기 삶의 수준에 대한 기대와 지원-

김 은 영

(한국고용정보원)

[요 약]

최근 들어 노인 빈곤층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중장년층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 그룹과 비은퇴자그룹을 나누고, 연령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은 비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에 비해 소득이 3배 이상 낮았다. 둘째, ‘공적연금소득’ 수급비율은 은퇴자그룹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은 개인총소득의 40% 이하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소득’은 두 그룹 모두 수급비율이 1%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퇴자그룹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는 은퇴를 하더라도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로부터의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양 그룹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은퇴자그룹의 공적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은퇴자그룹 개인 총소득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 전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공적연금 확대와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주제어: 은퇴, 재정안정성, 공적연금, 개인연금,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 서론

중고령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조기퇴직 증가 등으로 인한 은퇴세대들의 빈곤문제는 앞으로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빈곤률은

2011년 기준으로 48.6%(65세 이상)에 달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OECD, 2011; 오미애, 2013). 은퇴자에게 고정적인 임금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그들의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Gallo et al., 2006). 수년간 60대 이상 노년층 자살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퇴직한 세대의 공허함과 함께 노인빈곤층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이소정, 2010; 김형수·권이경, 2013).

또, 최근에는 50세를 전후로 직장에서 조기 퇴직자가 늘고 있으나,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받기 어려워 10년간 소득이 없는 시기를 보내야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미애·최새은(2010)은 은퇴준비가 미흡한 점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 유교문화의 가부장적 사회체계에서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임에도 가족생계와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중 311만 명 정도가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은퇴자 대열에 합류하여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은퇴에 따른 파급 효과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김미영 외, 2011; 이광용, 2011).

한편, 은퇴는 관점에 따라 역할상실 등의 위기로 보는 관점(Gallo et al., 2006)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긍정적 관점(Schmidt and Lee, 2008) 등 다양하다. 위기의 관점은 소득 감소, 은퇴에 대한 준비 부족,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은퇴를 개인에게 부정적인 생활 사건으로 본다(신현구, 2007). 반면, 생애주기 관점에서는 은퇴를 휴식으로의 생애 전이, 여가 활동 등 기타 다양한 생활 영역과의 연계성을 강조한다(한경혜, 2008). 은퇴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관점에 따라, 은퇴자 삶에 대한 해석과 지원책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전후 세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대의 삶의 만족도나 현재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세대들의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안정성'이라는 용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입과 지출비교를 통해 흑자재정과 적자재정으로 재정안정성을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과 소비의 비교를 통한 재정안정성문제에 초점을 둔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정안정성은 은퇴 전후세대들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성미애·최새은, 2010; 김교성·유재남, 2012),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은퇴 전후 재정상태 변화에 따라 현재 삶과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노년기 재정안정성이 은퇴 전후 세대 간에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과의 관계성 여부를 함께 파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은퇴 전후 세대들의 개인 총소득 및 공적연금소득의 주요 영향요인도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1) 재정안정성

중고령자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은퇴과정 유형별 결정요인과 은퇴만족도와 관련된 주제를 주로 다루어왔다. 고령층 임금근로자의 퇴직 현황과 기업규모별 결정요인(이철희, 2013), 중고령근로자의 은퇴과정유형 결정요인과 은퇴과정유형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이아영, 2011),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일자리 만족도(강순희·안준기, 2013), 은퇴자들의 은퇴만족도(신현구, 2007) 등 기존연구들은 주로 중고령자들의 퇴직 결정요인과 은퇴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은퇴만족도는 경제적 활동여부, 보유자산 등 노후소득보장이나 경제적 안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llo et al., 2006). 강인(2007)은 은퇴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입은 은퇴 후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게다가 인구사회학적으로 중고령자의 은퇴가 점차 빨라지기 때문에 중고령자의 재정상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재정안정성은 '은퇴 이후에도 안정된 노년기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및 경제상태의 균형 정도'로 정의한다. 은퇴를 전후로 개인의 소득과 소비는 달라질 것이고, 재정상태도 변화할 것이다. 은퇴 후에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질 것이고, 소득은 없거나 감소할 것이므로, 이미 모아둔 재산이 풍족하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만일, 은퇴 후에 소득이 없거나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노년기의 재정안정성은 낮다고 간주된다. 그러므로 은퇴 전후 소득과 소비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은퇴이후 재정적 안정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안정성은 대부분 국가적 차원에서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개인과 가구를 중심으로 은퇴 전후 소득과 소비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제적 균형 상태를 의미하는 재정안정성 문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은퇴 이전 대비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측정하거나 추정한 연구이거나(여윤경, 2002; 김성숙, 2009; 류건식·이봉주, 2009, 강성호, 2011), 공적연금 소득보장 수준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공적연금의 소득보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노후준비 여건과 상태가 불충분하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석재은·김태완, 2000; 강성호, 2011).

은퇴 후 소득과 관련해서는 성별에 따라 은퇴 후 소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김지경, 2005)와 은퇴 후 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육수준, 생애근로경험에 따른 은퇴경로의 유형, 공적연금 수급여부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가 있다(석상훈, 2010). 소비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는 조기은퇴 결정 이후 상대적으로 길어진 은퇴기간에 대비하기 위해 지연은퇴자보다 조기은퇴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소비함을 보여준 연구(안종범·전승훈, 2004)와 은퇴가 가계소비지출을 약 9%정도 감소시켰다는

연구가 있다(윤재호·김현정, 2011). 하지만, 아직까지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은퇴 전후 그룹 간 소득과 소비를 함께 비교하여 각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대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룬 논문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소득, 개인연금소득, 사회보장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원천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은퇴 전에는 근로소득이 있으나 은퇴 후에는 소득의 주요 원천이 사라지게 됨으로 은퇴 후 소득의 주요 원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양 그룹 간의 소비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소비의 경우 식비, 외식비, 공·사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등 생활비를 구분하였다. 소비는 은퇴 전후 소비액이 감소하는지, 감소한다면 그 변화는 어느 정도이며, 어느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은퇴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 및 가족 특성, 사회적 관계 특성, 혹은 은퇴 관련 특성 등과 은퇴 전후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 역시 올라간다는 기존 연구들은 사회보장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노년기 삶에 대한 경제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은퇴 후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중고령자의 신체적,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한다.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는 중고령자의 문화나 여가, 사회 참여를 포함하여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활 영역에 대한 안녕(well-being)과 행복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개인적 요인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은퇴 후 삶의 수준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구분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은퇴자 연령, 건강수준, 교육수준, 재정상태, 은퇴 전 근로형태, 은퇴시기 등이 포함된다. 개인적 특성은 개인의 성격 등이 관련 요인으로 밝혀졌다(배문조·전귀연, 2004; 김지경, 2005).

연령에 따라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사회 환경에서 연령은 상황을 지각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며, 이러한 지각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심리 및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성미애·옥선화, 2004).

신체적 건강은 은퇴 후 생활 만족도 및 재정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약해진 건강상태는 비용을 초래한다. 은퇴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애·최새은, 2010).

교육수준은 은퇴 전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소득은 은퇴 후의 재정안정성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연구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성미애(1999)는 교육수준과 생활만족간의 부정적 관계를 보이고, 성미애와 최새은(2010)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전 고용형태는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종 또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김양호, 2003; 성미애·최새은, 2010). 직업 변수의 영향을 간과할 순 없지만,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직종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은퇴자의 은퇴 전 직종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긍정적 삶의 태도, 직업에 대한 태도, 결혼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등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외, 2011).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에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은퇴 전후 세대별 소득과 소비의 은퇴 후 재정안정성 측면이다. 비은퇴자그룹과 은퇴자그룹의 주요 소득 및 소비의 원천에 대해 그룹별로 비교한다. 특히,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이 노년기 재정안정에 현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그룹 간 차이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감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비은퇴자그룹과 은퇴자그룹 간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미래 삶의 수준에 대한 기대감에 차이가 있는지, 정부에 거는 기대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노년기 삶의 수준에 대한 기대와 지원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기존에 다루었던 연령, 교육수준, 성별, 건강상태 등 은퇴 전후 세대들의 재정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비은퇴자그룹의 주요 소득원천인 개인총소득과 은퇴자그룹의 주요 소득원천인 공적연금소득의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3. 활용 자료 및 분석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삶 전반에 걸친 포괄적 자료를 생산 및 제공한다. 조사 주기는 2006년부터 매 짝수 연도에 동일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지난 2010년에 제3차 기본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전국단위 규모로 표본 설계된 패널조사이며, 조사방법은 대인면접방법(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 모집단은 2005년 현재 45세 이상 제주도를 제외한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제1차 기본조사에서는 10,254명의 패널을 구축, 제2차 조사에서는 8,688명을 조사하고, 제3차에서는 7,920명을 조사완료 하였다(표본유지율 81.7%). 조사내용은 인구, 가족, 건강, 고용, 소득과 소비, 자산,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사망자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남기성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제3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9세 이상의 은퇴자 및 비은퇴자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총 5,516명으로 남성 3,112명, 여성 2,40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은퇴자

그룹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3,415명과 은퇴자그룹은 비경제활동인구 4,505명 중 은퇴여부의 질문문항에 본인 스스로 '은퇴하였다'고 응답한 사람 2,101명으로 구성된 총 5,516명(100%)을 표본대상자로 하였다. 본인 스스로 '은퇴하였다'고 판단한 것 이외에 경제활동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은퇴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일을 그만둔 사람으로서, 본인 스스로 은퇴하였다고 생각하고 소일거리 이외에는 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¹⁾ 은퇴여부에 따라 비은퇴자와 은퇴자그룹을 나눈 후, 표본 대상자를 5세 단위(55세 이하, 55~60세, 60~65세, 65~70세, 70~75세, 75~80세, 80세 이상 등 7개 구간)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표 1〉 은퇴자와 비은퇴자 현황

(단위: 명, %)

경제활동상태		빈도수	은퇴구분	빈도수	퍼센트
경제활동인구 (3,415)	취업자	3,349	비은퇴자	3,415	43.1%
	실업자(구직활동)	66			
비경제활동인구 (4,505)	은퇴자	2,101	은퇴자	2,101	26.5%
	생애근로경력 無	2,404	생애근로경력 無	2,404	30.4%
합계		7,920		7,920	100%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미활동, 폐널탈락, 사망자는 제외한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9와 STATA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은퇴자그룹과 비은퇴자그룹을 나누고, 연령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교차분석 및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은 성별, 연령, 학력 등 그룹 간 빈도 및 평균비교를 위해 사용하였다. 교차분석은 집단 별 평균비교를 통해서 비은퇴자그룹과 은퇴자그룹간 비교를 위해 실시하였다. T-test는 현재 삶의 만족도와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감,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비은퇴자와 은퇴자그룹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정하고자 실시하였다. 또, 소득과 소비를 통한 노년기 재정안정성에 따라, 은퇴 전후 세대들의 삶의 만족감과 미래 삶의 기대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퇴 전과 후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토빗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개인 총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0값 이하가 감찰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토빗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상관계수와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하였다.

- 1) 본 설문문항에서 '조건이 떨어지더라도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일 할 의사가 있다',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있다면 일을 할 의사가 있다',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있고 상황 갖춰지면 일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실업자로 분류하였다.

토빗 모형은 왼쪽 또는 오른쪽이 감찰되지 못하였을 때(censored)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토빗 모형과 일반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모두 실행하여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계수값이 1% 이하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개인 총소득은 분포의 왜도를 줄이기 위해 log를 취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 조사 시 연령과는 폴리노미얼(Polynomial) 모형을 적용하지만, 본 연구는 주요 연령대가 60세 이상으로 연령에 따른 임금분포가 폴리노미얼 패턴을 보이지 않으므로 회귀분석 모델을 통한 소득과 영향 요인들 간의 직관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선형 모형을 유지한다.

$$\ln y_i = \begin{cases} \ln y_i^* & \text{if } \ln y_i^* > 0 \\ 0 & \text{if } \ln y_i^* \leq 0 \end{cases}$$

단, $\ln y_i^*$ 는 잠재변수로서 다음과 같다.

$$\ln y_i^* = a + \sum_k \beta_k x_k + \epsilon_i, \quad \epsilon_i \sim N(0, \sigma^2)$$

4. 분석 결과

1) 현황 분석

비은퇴자그룹의 평균 연령은 61세, 은퇴자그룹의 평균 연령은 71세로 나타났다. 은퇴자그룹의 평균 연령이 비은퇴자그룹에 비해 10살 이상 높았다.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비은퇴자그룹은 남성 60%, 여성 40%이고, 은퇴자그룹은 남성 51%, 여성 49%으로 비은퇴자 그룹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학력에 따라 구분해보면, 비은퇴자그룹은 초졸 34%, 고졸 35% 순이고, 은퇴자그룹은 초졸이 54%, 고졸이 21% 순이다. 한편, 2010년 조사당시 신규은퇴자의 평균 은퇴연령은 66세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현황 분석

(단위: 명)

내용	비은퇴자그룹		은퇴자그룹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전체 표본수	3,415	100%	2,101	100%
평균 연령(명)	61		71.5	
남녀비율(%); 남	2,036	60%	1,076	51%
남녀비율(%); 여	1,379	40%	1,025	49%
학력; 초졸	1,49	34%	1,134	54%
학력; 중졸	640	19%	303	14%
학력; 고졸	1,195	35%	435	21%
학력; 초대졸 이상	430	13%	229	11%
학력: 무응답	1	0%	0	0%

본 조사에서 신규은퇴자 286명을 대상으로 은퇴사유를 묻은 결과, '본인의 건강이 나빠져서'(31%),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18%),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하여'(8.4%)라고 응답하였다(1, 2순위 복수응답). 위의 결과는 건강악화나 일자리가 없어서 그만두는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은퇴사유가 여가나 삶의 여유를 누리기 위해 그만둔다는 능동적인 사유에 비해 41%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아 일을 계속해야하거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둬야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것이고, 빈곤노인이 될 확률이 높다(김지경, 2005).

2) 소득

(1) 개인총소득

은퇴자와 비은퇴자그룹을 나누어 연령별로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연평균 개인총소득은 비은퇴자그룹은 평균 1,941만원, 은퇴자그룹은 590만원으로 은퇴자그룹이 비은퇴자그룹에 비해 소득이 3배 이상 낮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총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비은퇴자그룹은 연평균 2,098만원, 은퇴자그룹은 연평균 997만원으로 근로소득부분에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소득이 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급자 비율 역시 비은퇴자그룹은 82%, 은퇴자그룹은 단지 10%만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신, 은퇴자그룹은 공적연금(수급자비율: 30%, 연평균소득: 707만원), 사회보장소득(수급자비율: 29% 연평균소득: 220만원), 사적이전소득(수급자비율: 100% 연평균소득: 116만원)이 주요 소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적연금소득은 비은퇴자그룹과 은퇴자그룹 모두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살펴보면²⁾, 연령이 높을수록

2) 특수직연금수급자는 전체 60명으로 그 비중이 매우 낮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수급가능연령이 만60세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

수급액과 수급자 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비은퇴자그룹 연평균 소득비교

(단위: 만원, 명, %)

연령구분	근로(총)소득	공적연금	개인연금	사회보장소득	기타	사적이전소득	자산총소득	개인총소득
평균금액	2,098	433	329	162	1,089	49	409	1,941
빈도수	2,810(82%)	590(17%)	14(0%)	297(9%)	48(1%)	3,415(100%)	498(15%)	3,415(100%)
54세 이하	2,757 810	602 5	- -	495 17	856 10	18 952	417 156	2,453 952
55~59세	2,540 669	1,917 27	456 3	347 10	2,459 12	35 794	575 130	2,378 794
60~64세	1,923 496	487 129	360 4	364 15	583 6	47 601	281 77	1,791 601
65~69세	1,628 340	416 204	284 3	165 50	986 7	61 435	464 58	1,628 435
70~74세	1,067 296	245 152	264 3	93 104	274 5	98 371	177 54	1,107 371
75~79세	719 137	234 55	156 1	138 68	305 8	122 182	283 19	829 182
80세 이상	648 62	163 18	- -	110 33	- -	130 80	63 4	717 80

*비은퇴자 수=3,415명, 기타소득은 위자료, 저작권, 특허권 등을 통해 얻은 수입을 포함함.

〈표 4〉 은퇴자그룹 연평균 소득비교

(단위: 만원, 명, %)

연령구분	근로(총)소득	공적연금	개인연금	사회보장소득	기타	사적이전소득	자산총소득	개인총소득
평균금액	997	707	449	220	847	116	500	590
빈도수(%)	219(10%)	629(30%)	26(1%)	600(29%)	52(2%)	2,101(100%)	289(14%)	2,101(100%)
54세 이하	1,567 24	96 2	- -	557 7	596 4	21 102	714 23	614 102
55~59세	1,432 27	609 9	288 2	845 10	1,848 2	65 130	445 21	575 130
60~64세	1,250 35	968 71	427 4	809 12	816 5	88 230	394 41	715 230
65~69세	1,052 50	824 186	463 7	216 77	1,073 8	99 364	582 65	847 364
70~74세	768 39	604 169	272 6	148 129	900 12	119 461	580 65	556 461
75~79세	384 29	613 119	584 3	193 157	909 10	142 386	329 41	501 386
80세 이상	307 15	573 73	693 4	213 208	493 11	158 428	412 33	421 428

*은퇴자 n=2,101명, 기타소득은 위자료, 저작권, 특허권 등을 통해 얻은 수입을 포함함.

급자 대상으로 본다.

은퇴자그룹은 186명(65~69세), 169명(70~74세), 119명(75세~79세), 73명(80세 이상)으로 줄었다. 연간 수입액은 824만원(65~69세), 604만원(70~74세), 573만원(80세 이상)으로 줄었다. 양 그룹간의 개인총소득은 은퇴자그룹이 비은퇴자그룹에 비해 낮고, 그 원인은 근로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총소득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소득도 모두 줄어든다. 은퇴자그룹이면서 연령이 많은 사람일수록 개인소득은 적고, 공적연금소득 또한 낮아 빈곤층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별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등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 집단별 소득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5> 비은퇴자그룹 개인별 총소득비중

(단위: 명, %)

연령구분	근로(총)소득	공적연금	개인연금	사회보장소득	기타	사적이전소득	자산총소득	개인총소득
평균	1,726 88.9%	75 3.9%	1 0.1%	14 0.7%	15 0.8%	49 2.5%	60 3.1%	1,941 100%
54세 이하	2,346 95.6%	3 0.1%	- -	9 0.4%	9 0.4%	18 0.7%	68 2.8%	2,453 100%
55~59세	2,140 90.0%	65 2.7%	2 0.1%	4 0.2%	37 1.6%	35 1.5%	94 4.0%	2,378 100%
60~64세	1,587 88.6%	105 5.9%	2 0.1%	9 0.5%	6 0.3%	47 2.6%	36 2.0%	1,791 100%
65~69세	1,273 78.2%	195 12.0%	2 0.1%	19 1.2%	16 1.0%	61 3.7%	62 3.8%	1,628 100%
70~74세	851 76.9%	100 9.0%	2 0.2%	26 2.3%	4 0.4%	98 8.9%	26 2.3%	1,107 100%
75~79세	542 65.4%	71 8.6%	1 0.1%	51 6.2%	13 1.6%	122 14.7%	30 3.6%	829 100%
80세 이상	502 70.0%	37 5.2%	- -	46 6.4%	- -	130 18.1%	3 0.4%	717 100%

*연령대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의 <표 5>를 보면, 비은퇴자그룹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에 이른다. 반면, 아래 <표 6>을 살펴보면 은퇴자그룹의 경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낮아지는 대신, 공적연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한다. 사적이전소득은 자산총소득과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와 부부, 친지 등의 도움을 일컫는 사적이전소득은 70세 이상 노인의 전체소득 중 20~40%를 차지하나, 자산총소득은 이와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기존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자녀 등에 의해 사적이전소득이 56%이상 달하는 전형적인 사적소득 의존형 국가라고 하였는데(석재은·김태완, 2000; 김지경, 2005), 1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수입 중 적어도 30~40%는 자녀와 친지 등이 부담하고 있어, 사적이전소득이 주요소득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로서 자녀출산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사적이전소득에 의지하는 것은 점차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은퇴 이후 주요 소득원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6〉 은퇴자그룹 개인별 총소득비중

(단위: 명, %)

연령구분	근로(총)소득	공적연금	개인연금	사회보장소득	기타	사적이전소득	자산총소득	개인총소득
평균	104 17.6%	212 35.9%	6 1.0%	63 10.7%	21 3.6%	116 19.7%	69 11.7%	590 100%
54세이하	369 60.1%	2 0.3%	- -	38 6.2%	23 3.7%	21 3.4%	161 26.2%	614 100%
55~59세	297 51.7%	42 7.3%	4 0.7%	65 11.3%	28 4.9%	65 11.3%	72 12.5%	575 100%
60~64세	190 26.6%	299 41.8%	7 1.0%	42 5.9%	18 2.5%	88 12.3%	70 9.8%	715 100%
65~69세	144 17.0%	421 49.7%	9 1.1%	46 5.4%	24 2.8%	99 11.7%	104 12.3%	847 100%
70~74세	65 11.7%	221 39.7%	4 0.7%	41 7.4%	23 4.1%	119 21.4%	82 14.7%	556 100%
75~79세	29 5.8%	189 37.7%	5 1.0%	78 15.6%	24 4.8%	142 28.3%	35 7.0%	501 100%
80세이상	11 2.6%	98 23.3%	6 1.4%	103 24.5%	13 3.1%	158 37.5%	32 7.6%	421 100%

*연령대별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2) 공적이전총소득

총소득 중 사회보장소득을 포함한 공적이전총소득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공적이전총소득 수급자 비율은 은퇴자그룹이 비은퇴자그룹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은퇴자의 30%는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장총소득은 29%에 이른다. 하지만, 소득액을 살펴보면, 소득항목별 수혜자 간의 큰 차이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수급자는 비은퇴자그룹 15.8%, 은퇴자그룹 23.5%, 특수직역연금수급자는 비은퇴자그룹 1.8%, 은퇴자그룹 7.5%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소득액은 연평균 296만원, 특수직역연금소득은 연평균 1,887만원으로 공적연금 내에서도 두 연금 간 소득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비은퇴자그룹의 절반이상이 월평균 16만 원 이하, 은퇴자그룹 중 65%는 월평균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수급 받고, 은퇴자 그룹 중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단지 4명에 불과하였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소득은 비은퇴그룹 월평균 수급액 129만원에, 절반가량은 133만 원 이상에서 월 최대 340만원까지 수급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퇴자그룹은 월평균 158만원이고, 절반가량은 170만 원 이상, 월 최대 400만원까지 수급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공적연금수급자 비율은 전체의 17~30%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공적연금기능은 아직까지 특수직역연금에 국한되어 있다.

사회보장총소득은 은퇴자그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급여 130명(6.2%), 사회복지수당급여 438명(20.8%)으로 나타났다. 비은퇴자그룹에서는 이보다 낮은 31명(0.9%), 235명(6.9%)으로, 근로빈곤

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수급금액 역시, 비은퇴자그룹 연평균 353만원, 은퇴자그룹 연평균 379만원으로 월 30만 원 이하로 큰 차이가 없었고, 연령이 많을수록 수급자도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이를 충당해 줄만한 정부지원책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그룹별 수급자 연평균소득 및 수급비율

(단위: 만원, 명, %)

소득내역	비은퇴자그룹			은퇴자그룹		
	연평균소득	인원수	수급비율	연평균소득	인원수	수급비율
공적이전총소득(①+②)	376	807	23.6%	512	1,125	53.5%
①공적연금총소득(가+나)	433	590	17.3%	707	629	29.9%
가. 국민연금소득	255	538	15.8%	296	494	23.5%
나. 특수직역연금소득	1,972	60	1.8%	1,887	158	7.5%
②사회보장총소득(가+나+다+라+마)	162	297	8.7%	220	600	28.6%
가. 실업급여	487	10	0.3%	-	0	0.0%
나. 산재급여소득	560	1	0.0%	1,106	7	0.3%
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급여소득	353	31	0.9%	379	130	6.2%
라. 보훈연금급여소득	427	28	0.1%	431	88	4.2%
마. 기타사회복지수당급여소득	84	235	6.9%	85	438	20.8%

*비은퇴자그룹 n=3,415명, 은퇴자그룹 n=2,101명, 중복카운트가능.

이와 관련하여, 2007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³⁾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전체 노인들에 대한 수급비율은 비은퇴자그룹 15%, 은퇴자그룹 44%로 조사되었고, 수급액은 1인기준 월평균 8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1998년과 2007년 2차례의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축소로 소득대체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오신희·정창률, 2012). 최근에는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형 기초연금안을 발표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과의 연계 지급방안에 대해 논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정부가 적정비율로 설정한 60%에 훨씬 미달하는 것은 정부의 공적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3)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며, 2012년에는 390여만 명의 노인이 수급을 받았다. 1인 최고 10만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15만원정도 지급된다. 최근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손해를 볼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러한 공정성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다.

(3) 개인연금소득

본 조사에서 개인연금소득은 비은퇴자그룹과 은퇴자그룹 모두 합하여 총 40명에 불과하였다. 비은퇴자그룹의 경우 연평균 329만원, 은퇴자그룹의 경우 연평균 449만원으로 전체 비은퇴자의 0.4%, 은퇴자의 1.2%만이 개인연금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7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단 한명도 없던 수급자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1명에서 4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수금액도 연간 156만원에서 284만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을 볼 때, 개인연금소득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연금소득의 낮은 수급자 비율에 대한 연구는 60세 이상 인구의 개인연금 수급자 비율이 제도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2006년에도 약 1%에 불과하고, 2030년에는 약 1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김수완·김순옥,2007)

개인연금은 현재까지 개인연금 수급률이 매우 저조한 탓에, 수급률에 대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개인연금 가입률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연금 가입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급률을 보는 것이 본 연구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젊은 세대들의 노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개인연금 가입률 증가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여러 논문을 통해 확인된다(김원섭·강성호, 2008; 이순재·김현수, 2009; 오신휘·정창률; 2012)⁴⁾.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잘 구축된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보면,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약 10년 동안 중단연구를 통해, 세대 간 개인연금의 빈도가 나이는 세대와 비교하여 젊은 세대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Leeson, 2007). 복지선진국에서도 공적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이 노후의 재정적 안정을 확실히 하기 위한 수단임을 보여주었다⁵⁾. 따라서, 아직까지 공적연금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도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3) 소비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은퇴전후 세대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소비는 비은퇴자그룹과 은퇴자그룹 간 연령별 추이와 소비에 해당하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식비, 외식비, 공·사교육비, 주거비, 보건 의료비, 피복비 등이 해당된다. 본 조사에서는 소득이 개인에 대한 질문인 반면, 소비에 대한 문항은

4) 본 조사에서는 개인연금 가입률을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에 따르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개인연금가입자 비율은 6.7%로 나타났다(강신옥외, 2010). 만일, 세대별로 이를 구분하여 중고령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입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20~30대 젊은 세대만을 살펴보면 이보다 증가할 것이다.

5) 1987년 40-44세 세대의 60%가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두 번째 웨이브에서 50-54세가 되었을 때 75%로 증가하였다. 두 번째 웨이브의 나이가 많은 두 세대는 1997년 두 번째 웨이브 때 이러한 준비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Leeson, 2007). 본 연구에서도 개인연금의 수급자비율의 증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샘플 수를 늘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관련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를 비교하기 위해 가구총소비 뿐만 아니라, 가구총소득을 추가로 살펴보고, 가구원 수⁶⁾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비 지출의 증감내역을 함께 살펴보았다.

〈표 8〉 비은퇴자그룹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총소득과 총소비

(단위: 만원)

가구원수	가구 총소득	가구총소비(%)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기타
평균	253	161(64%)	41	10	22	8	18	10	9	43
1인	117	85(73%)	24	6	9	5	14	8	5	14
2인	182	122(67%)	31	8	9	3	17	10	7	37
3인	269	168(62%)	45	11	19	6	18	10	10	49
4인 이상	349	226(65%)	55	14	42	17	21	10	13	54

*비은퇴자 N=전체 3,415명중 1,910명 응답(55.9%), %는 소득대비 소비비율임.

비은퇴자그룹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253만원, 가구총소비는 161만원으로 소득대비 소비비율이 6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총소득대비 가구총소비 비율은 1인가구일 때 73%, 2인가구일 때 67%, 3인가구일 때 62%, 4인 이상 가구일 때 65%이다.

〈표 9〉 은퇴자그룹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총소득과 총소비

(단위: 만원)

가구원수	가구 총소득	가구총소비(%)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기타
평균	161	120(75%)	37	8	13	7	17	12	7	19
1인	63	67(106%)	22	5	9	4	13	10	4	0
2인	116	103(89%)	33	7	5	4	17	12	6	19
3인	200	136(68%)	42	8	11	6	19	16	9	25
4인 이상	290	199(69%)	56	12	32	19	22	14	12	32

*은퇴자그룹 N=전체 2,101명중 1,282명 응답(61%)함. %는 소득대비 소비비율임.

은퇴자그룹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161만원, 가구총소비는 120만원으로 소득대비 소비비율이 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은퇴자그룹에 비해 가구 총소득과 총소비 모두 낮다. 가구총소득대비 가구총소비 비율은 1인 가구 일 때, 106%, 2인가구일 때 89%, 3인가구일 때 68%, 4인 이상일 때 69%로 조사되었다.

양 그룹 모두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과 소비가 동시에 증가하였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대체적으로 소득대비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인 혹은 4인 이상 가구원이 함께 살았을 때 경제적이었고, 1인 가구일 때 은퇴자그룹은 오히려 적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 10〉은 비은퇴자그룹의 월평균 생활비와 항목별 생활비 내역을 보여준다.

6) 4인 이상부터는 그 증가분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구원수는 1인, 2인, 3인, 4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10〉 비은퇴자그룹 연령대비 월평균 생활비내역

(단위: 만원)

연령구분	생활비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기타
평균	161	41	10	22	8	18	10	9	43
54세이하	228	51	14	44	17	20	10	12	60
55-59세	166	44	11	21	6	19	9	11	45
60-64세	134	39	10	7	3	19	8	8	40
65-69세	110	33	7	6	4	18	10	7	25
70-74세	100	27	7	8	6	15	13	6	18
75-79세	87	23	5	6	3	14	10	5	21
80세이상	59	17	2	0	0	11	6	3	20

* 비은퇴자그룹 N=전체 3,415명중 1,910명 응답(55.9%), 월평균 생활비는 가구조사이므로 응답자를 포함한 응답자가구의 생활비를 의미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전체평균을 보면, 월평균 생활비는 비은퇴자그룹의 경우 161만원, 은퇴자그룹의 경우 평균생활비 120만원으로, 은퇴자그룹이 비은퇴자그룹에 비해 평균생활비가 낮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생활비가 감소한다. 하지만, 감소폭은 60세 이상을 넘어서면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비라는 것은 은퇴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그만큼 감소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은퇴자그룹 연령대비 월평균 생활비내역

(단위: 만원)

연령구분	생활비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기타
평균	120	37	8	13	7	17	12	7	19
54세이하	216	53	13	35	19	21	10	11	54
55-59세	161	46	10	12	6	20	15	12	40
60-64세	135	44	8	7	5	17	13	7	34
65-69세	116	38	7	6	4	17	10	6	28
70-74세	109	36	8	11	7	17	14	7	9
75-79세	100	30	6	13	9	16	12	6	8
80세이상	103	31	7	16	7	17	12	6	7

* 은퇴자그룹N=전체 2,101명중 1,283명 응답(61.1%), 월평균 생활비는 가구조사이므로 응답자를 포함한 응답자가구의 생활비를 의미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11〉 소비내역을 살펴보면, 양 그룹 모두 식비와 교육비, 주거비가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공·사교육비, 피복비는 공통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크게 감소하였고, 주거비,

보건의료비, 외식비는 연령이 증가하여도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항목 중 주거비와 보건의료비, 식비의 경우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이 항목들은 그룹과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액 이상 여전히 소비되는 것으로 볼 때, 정부차원에서 주거정책과 보건의료정책부분의 지원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현재 삶의 만족도 및 미래에 대한 기대감

기존 연구에서 현재 자신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자발적 퇴직과 정년퇴직과 비교해서 근무기간, 자발적 이직여부, 세부 이직사유, 금전자산, 건강자산, 사회적 자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성지미·안주엽, 2011). 본 연구에서는 퇴직유형과 금전·건강·사회적 자산보다는 현재 은퇴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부문의 재정적 안정상태가 과연 현재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관심이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와 미래 삶에 대한 기대감에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에 대한 기대감은 정책적 방향을 마련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노년기 소득보장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상태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면, 은퇴 전부터 개인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Leeson, 2007).

현재 삶의 만족도는 은퇴자그룹과 비은퇴자그룹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leq 0.05$).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은 은퇴자그룹이 비은퇴자그룹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그리고 삶의 질에서 모두 은퇴자그룹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80세 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 모두에서 그룹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 경제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 모두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은퇴자그룹에 비해 은퇴자그룹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은퇴전후의 생활비교에 대한 추가질문을 한 결과, 은퇴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생활이 더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였다.

〈표 12〉 그룹별 현재 삶의 만족도

연령구분	전체			비은퇴자그룹			은퇴자그룹		
	건강상태	경제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	건강상태	경제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	건강상태	경제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
전체평균	55	52	60	62	56	64	48*	47*	56*
54세 이하	64	57	65	66	58	66	55*	52*	60*
55~59세	61	57	64	64	58	66	50*	52	59*
60~64세	59	54	63	62	56	64	55*	53	61
65~69세	54	53	61	60	57	65	50*	50*	58*
70~74세	50	48	58	54	51	61	48*	46	56*
75~79세	47	46	55	51	48	59	45	44*	53*
80세 이상	44	44	54	52	47	56	43	42	54

* 건강상태, 경제상태, 전반적인 삶의 질 모든 영역에서 $P=0.000 \leq 0.05$ 로서 95% 신뢰구간에서 두 집단(비은퇴자그룹 대비 은퇴자그룹) 간 차이를 보임.

** 동년배와 비교하여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임

*** 0점~100점사이의 10점간격의 11점 척도이며, 응답자는 전체 표본집단임.

미래 생활수준 및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국가 기대감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생활수준이 미래에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묻는 질문에는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비은퇴자그룹이 은퇴자 그룹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라에서 나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것 같다'는 기대감은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5$). 비은퇴자그룹은 42.6점, 은퇴자그룹은 41.6점으로 양 그룹 모두 다소 부정적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국가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개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3> 그룹별 미래 생활수준 및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기대감

연령구분	전체		비은퇴자그룹		은퇴자그룹	
	나의 앞으로의 생활수준이 점차 낮아질 것이다	나라에서 나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앞으로의 생활수준이 점차 낮아질 것이다	나라에서 나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앞으로의 생활수준이 점차 낮아질 것이다	나라에서 나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체	48.1	42.1	49.7	42.6	46.5*	41.6
54세 이하	48.0	41.5	49.9	42.7	46.1	40.2
55~59세	48.6	41.4	49.0	40.9	48.1	41.8
60~64세	48.3	42.6	50.1	42.8	46.5*	42.3
65~69세	49.5	42.4	50.5	43.4	48.4	41.3
70~74세	47.8	43.3	48.9	44.6	46.7	41.9
75~79세	48.0	42.5	50.8	43.0	45.1*	41.9
80세 이상	47.0	42.2	48.6	43.4	45.4*	41.0

* '나의 앞으로의 생활수준이 점차 낮아질 것이다'는 $P=0.000 \leq 0.05$ 로서 95% 신뢰구간에서 두 집단(비은퇴자그룹 대비 은퇴자그룹) 간 차이를 보임. '나라에서 나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는 $P=0.121 > 0.05$ 로서 95% 신뢰구간에서 비은퇴자그룹 대비 은퇴자그룹 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0~100점사이 10점간격의 11점 척도이며, 응답자는 전체 표본 집단임.

노후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와 관련해서 두 집단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기대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직까지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4〉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

연령구분	비은퇴자그룹				은퇴자그룹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 체	46.3	43.7	54.9	52.1	39.2*	43.6	53.9	51.1
54세이하	48.3	42.9	55.5	52.8	40.5	42.5	57.9	53.5
55~59세	47	41.6	54	51.6	45.9	42.9	53.4	50.3
60~64세	47.7	44.6	54.9	51.7	47.1	42.7	56.4	50.9
65~69세	44.7	42	54.4	51.7	42.9	41.5	53.7	51.8
70~74세	43.7	47.8	56.3	53.3	38.3	42.6	53.4	50.8
75~79세	41.3	48.5	54.6	51.4	34.8	46	54	51.5
80세 이상	38.6	47	52.1	50.6	34.3	45.4	52.6	50.4

* 국민연금제도는 $P=0.000 \leq 0.05$ 로서 95% 신뢰구간에서 두 집단(비은퇴자그룹 대비 은퇴자그룹) 간 차이를 보였으나, 나머지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음.

** 0점~100점사이의 10점간격의 11점 척도이며, 응답자는 전체 표본집단임.

국민연금제도는 은퇴자그룹에 비해서 비은퇴자그룹에서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leq 0.05$). 은퇴자그룹에서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비은퇴자그룹 평균 46.3점, 은퇴자그룹 평균 39.2점). 향후에는 현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않은 은퇴자그룹을 중심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확대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에 놓인 이들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정부지원정책이 실제적으로 노후소득보장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 및 소비가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살펴보았다. 양 그룹을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소득부분은 비은퇴자그룹의 경우 모든 제도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변수 유의성 $P \leq 0.05$). 은퇴자그룹은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대감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소비부분은 양 그룹 모두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기대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총소득과 가구총소비가 각각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소득과 소비가 어떻게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 개인 총소득 및 공적연금소득과의 주요 영향요인 분석

은퇴 전후 세대의 개인총소득 및 공적연금소득의 주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은퇴자그룹과 비은퇴자그룹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은퇴자그룹의 경우에는 개인총소득을, 은퇴자그룹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은퇴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연금 등 다양한 소득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전체소득을 살펴보았다. 은퇴자의 경우에는 은퇴이후 은퇴전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대신,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로 가장

높다는 것을 <표 6>에서 확인하였으므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서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적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y변수는 은퇴자그룹의 경우 공적연금소득, 비은퇴자그룹의 경우 개인총소득이다. x변수는 성별(0-여성, 1-남성), 연령, 학력(1-초졸, 2-중졸, 3-고졸, 4-대졸), 생활비(만원), 건강상태(0-100), 경제상태(0-100), 전반적인 삶의 질(0-100), 나의생활수준(0-100), 나라에서 나의 노후생활보장(0-100) 이다. 주관적인 판단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공적연금소득과 개인 총소득에 대해 주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각 요인에 대해 계수(B), 표준오차(Std. Err), 표준 계수(SE B), 유의수준(P)을 보았다. 계수(B)는 요인과 반응변수 간에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표준 계수(SE B)는 요인들 간에 영향정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 두 가치를 나타내었다.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한 결과, 5 이하로 다중공선성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공적연금소득과 개인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

	은퇴자그룹-공적연금소득 (N=628)				비은퇴자그룹-개인총소득 (N=3,411)			
	B	Std.Err	SE B	P	B	Std.Err	SE B	P
성별	0.393	0.086	0.341	0.000***	1.390	0.081	0.524	0.000***
연령	-0.025	0.006	-0.204	0.000***	-0.017	0.005	-0.084	0.001***
학력-중졸	0.143	0.111	0.124	0.201	0.007	0.114	0.027	0.953
학력-고졸	0.449	0.093	0.394	0.000***	0.253	0.106	0.134	0.017*
학력-대졸	1.484	0.110	1.305	0.000***	0.806	0.140	0.367	0.000***
건강상태	0.006	0.002	0.115	0.006***	0.005	0.002	0.041	0.028*
전반적 삶의 질	0.003	0.002	0.050	0.210	0.003	0.003	0.026	0.260
나의생활수준	0.000	0.002	-0.002	0.956	-0.003	0.002	-0.026	0.073
국가의 기대감	0.002	0.002	0.041	0.204	0.005	0.002	0.034	0.003*
상수	6.391	0.449	-0.633	0.000	5.997	0.404	-0.335	0.000
보조상수	-0.114	0.028	-0.245	0.000	0.769	0.012	-0.359	0.000
R^2 (Adj R^2)	0.382 (0.373)				0.144 (0.141)			

*p<.05, ***p<.001

먼저 비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0.524***). 이는 기존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에서 보여준 결과와 동일하다(금재호, 2011). 이러한 성별 차이는 은퇴 후 공적연금 수급에서도 나타났다.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대한 기여가 적으므로, 남성들에 비해 수급액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은 50대 이상만 조사되었으며 개인 총소득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은퇴자그룹의 경우에는 소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나이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일수록 빈곤노인이 증가하고, 노인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학력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은퇴자의 공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났다(고졸: 0.394***, 대졸: 1.305***). 이는 기존 연구에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남성일수록 일에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성미애·옥선화, 2004; 김미영 외, 2011). 이러한 결과는 은퇴자에 대한 고령화 복지 지원책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폭넓게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공적연금 소득은 개인의 건강상태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개인의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미영 외, 2011). 따라서 은퇴 전부터 건강관리를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국가에 대한 기대감은 은퇴 전에는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은퇴이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기대감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과의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각차는 은퇴 준비와 은퇴이후의 경제적 충격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에 맞추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중장년층 은퇴 전후 세대들의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또, 재정상태 변화에 따른 은퇴 전후 세대 간에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과의 관계성 여부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급실태와 개인 총소득 및 공적연금소득의 주요 영향요인 등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낸 사실과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총소득은 연령이 높고, 은퇴자그룹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데, 이를 보완해 줄만큼 공적연금소득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공적연금소득' 수급비율은 은퇴자그룹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공적연금비중은 개인총소득의 40%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연금 중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하면, 그 수치는 훨씬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서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수급자비율 범위확대와 수급액 증가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스위스의 경우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을 통해 총소득의 70%를 목표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적 책임은 더욱 늘어나야 한다.

둘째, '개인연금소득'은 두 그룹 모두 수급비율이 1%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의 수급자 비율과 수급액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젊은 세대들의 노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개인연금가입 증가추세와 동일한

결과로 해석된다. 사회보장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국가재정 상 한계가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준비 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 지원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은퇴자그룹에서는 아직까지 전체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40%에 이른다. 10년 전 50%에 이른 것과 비교해보면 점차 작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족 내에서 복지가 이뤄지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인구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미국과 같이 공적이전소득이 은퇴 이후 주요한 소득원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은퇴를 하더라도 소비는 크게 줄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는 낮아지지만, 그 감소 액은 소득과 비례하여 감소하지는 않았다. 또, 소비항목 중 주거비와 보건의료비, 식비의 경우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그룹과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액 이상 여전히 소비되는 것으로 볼 때, 정부차원에서 주거정책과 보건의료정책부에서 지원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삶의 만족도는 은퇴자그룹이 비은퇴자그룹에 비해 낮고, 반대로 미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은 비은퇴자그룹이 은퇴자그룹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가가 미래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양 그룹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본 결과, 은퇴자그룹이 비은퇴자그룹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은 노인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기대감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양 그룹 모두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거는 기대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국민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과 사회보장소득이외에 기댈만한 곳이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액은 월 8만원 내외이며, 사회보장소득액도 월 30만 원 이하에 불과하고, 이러한 수급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수급비율 역시 전체 은퇴자그룹의 1% 미만이었다. 따라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은퇴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노인 빈곤률 증가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이러한 사회문제는 결국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은퇴자그룹의 공적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은퇴자그룹 개인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비교한 결과, 양 그룹 모두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이 높고, 저학력 은퇴자 일수록 공적연금소득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이러한 결과는 은퇴 고령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폭넓게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한 재정적 문제는 안정적이지 않다. 특히, 연령이 높은 은퇴자들일수록 빈곤층에 속할 위험이 가장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만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협소하고, 그 보장수준 또한 낮다. 노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적연금 확대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법⁷⁾을 통한 퇴직 연령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노년층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소득감소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지출이 줄어들어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1차년도 자료만을 이용한 횡단연구로 은퇴자의 재정안정성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샘플 수를 확보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들의 변화 추이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종단 연구도 필요하다.

또, 최근 은퇴에 대한 개념 정의는 경제활동 참여유무, 주된 일자리 중단여부, 자발성유무, 일정연령 도달 여부 등 전통적 개념에 주관적 평가가 다소 혼재된 경향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공식은퇴연령과 실제은퇴연령이 63세 전후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은퇴 시기는 실제은퇴연령(약 70세)과 공식적 은퇴연령(약 60세), 사회보장수급연령(약 65세)와의 간극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시기가 외국과 달리 매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자발과 비자발, 조기퇴직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은퇴를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은퇴를 보다 세분화하여 집단 간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은퇴 고령자에 대한 복지 정책 마련을 위한 은퇴 전후 세대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호, 2011, “생애기간을 고려한 공·사적 연금소득 추정”, 『보험학회지』, 88: 51-87.
- 강신욱·손창균·남상호·김계연, 2010,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순희·안준기, 2013,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용패널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2013. 6. 4.
- 강 인, 2007, “은퇴 남성 노인의 어려움과 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복합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259-283.
- 금재호, 2011, “성별 임금격차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17(3): 161-184.
- 김교성·유재남, 2012,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소득 계층에 관한 종단연구”, 『노인복지연구』, 58: 163-188.
- 김미영·손서희·박미석, 2011, “한국 중고령 남성의 은퇴 경험과 은퇴 후 삶의 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65-78.
- 김성숙, 2009, “50대 비은퇴자의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가입구조와 특성”, 『사회과학논집』,

7) 2016년까지 300인이상 기업에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3.4)

- 28(1): 27-50.
- 김수완·김순옥, 2007,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전망-사적연금의 수급자수 전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2): 271-296.
- 김원섭·강성호, 200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2(3): 261-292.
- 김지경, 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55-76.
- 김태현·김양호, 2003, “중년남성의 남성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 김형수·권이경, 2013,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236-245.
- 남기성·권윤섭·양수경·박선연·김정숙, 2012, 『2010년 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류건식·이봉주, 2009,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업경영연구』, 15(3): 189-205.
- 배문조·전귀연, 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89-102.
- 석상훈, 2010,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경로 유형과 은퇴 후 소득비교”, 『경제발전연구』, 16(2): 59-82.
- 석재은·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미애, 1999,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미애·옥선화, 2004, “여성 퇴직자의 퇴직 후 생활에 관한 질적연구”, 『가족과 문화』, 16(2): 55-91.
- 성미애·최새은, 2010, “남녀 은퇴자의 은퇴전이 경험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젠더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13-25.
- 성지미·안주엽, 2011, “중고령자의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29(2): 175-212.
- 신현구, 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2007(3): 81-94.
- 안종범·전승훈, 2004, “은퇴 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노동경제논집』, 27(3): 1-23.
- 여운경, 2002, “목표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40(3): 83-97.
- 오미애, 2013, “OECD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데이터를 분석한 노인빈곤을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6: 25-35.
- 오신휘·정창률, 2012,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공적연금의 노후소득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중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 39(1): 1-22.
- 윤재호·김현정, 2011,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경제분석』, 17(1): 1-44.
- 이소정, 2010, “노인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6(4): 1-19.
- 이순재·김현수, 2009, “개인연금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사회보장연구』, 25(3): 249-280.
- 이아영, 2011, “중고령근로자의 은퇴과정유형 결정요인과 은퇴과정유형이 행복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국제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철희, 2013, “한국 고령인력의 퇴직: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별 분석”, 『연구역량강화세미나자료집』,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2013. 8. 28.
- 이관용, 2011, “한·미·일 베이비부머의 은퇴 상황 비교”, 『CEO Focus』, 273: 1-21.
- 한경혜, 2008, “라이프코스 관점에서 본 은퇴 경험의 남녀차이”, 『한국사회학』, 42(3): 86-118.
-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0년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원자료.
- Gallo, W., Bradley, E. H., Dubin, J. A., and Jones, R. N., 2006, “The persistence of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workers who experience involuntary job loss”, *Journal of Gerontology*, 61B(4): 221-228.

Leeson, G. W., 2007, “Financial security in old age__the myth of welfarism? Results from the danish longitudinal future study”,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7(2): 1-16.

OECD, 2011, “OECD estimates derived from the european and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http://stats.oecd.org>.

Schmidt, J., and Lee, K., 2008, “Voluntary retirement and organizational turnover intentions: The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work and non-work commitment construct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2: 297-309.

The Financial Stability of Before-and-after Retirement -Expectation and Support for the Quality of the Elderly Life-

Kim, Eunyong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Lately, as the problem of the aged poverty becomes a big social issue,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 of financial stability with respect to the income and consumption of before-and-after retirement generations. After dividing the data in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into retired and non-retired groups,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 among ageing groups by cross analysis and t-test. First, the result tells that the total personal income of retired group is lower than the one of non-retired group. Second, the public pension income benefit ratio of retired group is only 30% of it's total income, and the amount of public pension appears to be 40% of the total pension income. The benefit ratio of the personal pension income is low as about 1% in both groups, The private transfer income of the retired group takes relatively large portion in its total personal income. Third, as people gets older, financial stability gets worse because consumption does not decrease as much as the income decreases. Fourth, it is turned out that the expectation of old life supporting from nation is low in both groups. Fifth,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income of the public pension in the retired group are gender, age, education, and health status, when compared with the factors to the personal total income of the non-retired group. In terms of policy,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s of the intensificat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the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personal pension.

Key words: Retirement, Financial Stability, The Public Pension, The Private Pension,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논문 접수일 : 13. 10. 22, 심사일 : 13. 11. 19, 게재 확정일 : 14. 01. 27]